

	보 도 자 료	
	담당: 정책위원회	연락처: (02)6788-2606

대한민국 대도약 원년! 2026년도 민주당 민생·개혁입법 성과!

더불어민주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·개혁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 민생경제 흐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. 지난달 수출이 30% 넘게 증가하며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, 코스피 5천 시대 개막에 이어 5500을 돌파(2.12)하는 등 역사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. 국내·외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민주당은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도 민생·개혁입법에 매진하고 있다. 지난 1월 임시국회에는 49건의 중점법안 및 신속추진 법안을 통과시켰고, 설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33건의 주요법안을 처리했다.

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를 위해 △반도체특별법 △과학기술기본법 △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 특별법 △방위산업발전법 △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등을 통과시켜 우리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.

△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△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등도 통과시켜 농수산물 물가 불안을 해소하고,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 구조 개선에도 기여했다.

아울러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△하도급거래공정화법 △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처리했다.

지역교육 혁신과 인재양성을 위한 △고등교육법 △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과 함께 △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 △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·부산 설치 관련 9개 법안도 통과시켜 균형성장의 토대 또한 마련했다.

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 코리아 프리미엄을 안착시키기 위한 △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△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법(전자증권법)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,

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△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과 △기상법을 통과시켜 과학에 근거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.

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핵심인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연말 △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△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△국립대병원 설치법 △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도 처리해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했다.

국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△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△주택법 △주차장법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△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처리했다.

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△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과 최근 연달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△개인정보보호법도 통과시켰다.

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노동권, 안전망 강화를 위한 △산업안전보건법 △학교급식법 △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△고용보험법 △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이어, △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△자동차관리법도 통과시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마무리 했다.

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-컨텐츠의 보호, 강화를 위해 △국민체육진흥법 △공연법 △저작권법을 처리해 암표를 근절하고 K-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도 마련했다.

‘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’이라는 보훈 가치를 실현하는 △보훈 관련 9개 법안과 군인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△군인사법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되새기고 헌법 제정의 가치를 고취시키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△공휴일법도 통과시켰다.

완전한 내란극복을 위한 △2차 종합특검법(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)도 통과시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종식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였다.

정부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행정을 위한 △국가재정법 △행정규제기본법 △전자정부법도 통과시켜 이재명정부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서 국정운영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.

지난 두 달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.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도 쉬지 않고 더 많은 민생·개혁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,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.

<첨부1> 2026년도 더불어민주당 민생·개혁입법 목록 (26.01~02.12 현재)

2026. 02. 13.

더불어
민주당
한성애 정책위원회 의장

첨부1 2026년도 더불어민주당 민생·개혁 입법 목록 (26.01~02.12 현재)

순번	법안명	주요내용	상임위
1	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-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 임명 - 수사 기간 : 준비 기간 20일 + 90일 + 30일 (특검 필요 시) + 30일(대통령 승인) - 인력 : 특별검사보 5명, 특별수사관 100명, 파견검사 15명, 파견공무원 130명 	법사위
2	법원설치법	-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·부산 설치 관련 법	
3	법원조직법		
4	민사소송법		
5	민사집행법		
6	소액사건심판법		
7	중재법		
8	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절차법		
9	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		
10	행정소송법		
11	국회법		- 무제한 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개선
12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	- 투자계약증권의 중개·유통을 허용하고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	정무위
13	전자증권법	- 전자증권 발행 시 분산원장 이용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	
14	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	-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	
15	행정규제기본법	- 규제개혁위원회를 '규제합리화위원회'로 변경,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,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	
16	하도급거래공정화법	-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	
17	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'준보훈병원' 도입 - 국가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-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존속이 위태로운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 확대 	
18	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		
19	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		
20	독립유공자예우법		
21	제대군인지원법		
22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		
23	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법		
24	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		
25	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		

순번	법안명	주요내용	상임위
26	소비자기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쟁조정절차의 간소화 제도 도입 * 분쟁 신청 증가에 따라, 3인 이상 구성요건의 분쟁 조정회의 절차를 소액사건의 경우 1인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-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권익증진 도모 위해 물품 유통 및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긴급 차단을 위해 비밀누설 금지 의무 예외 신설 	
27	개인정보보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업주 및 대표자의 책임 강화, 개인정보보호인증(ISMS-P) 의무화로, 인증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폐지 -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부과 -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투자 확대 등 사전예방 투자 촉진을 위한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-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의 범위 확대를 포함하여 피해 확산 방지 강화 	
28	국가재정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지출 투명성 강화 · 예비비 사용 국회 관리 강화 ·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정확성 제고 - 세입 운영 책임성 강화 · 세입 예산 집계 정확성 제고 및 국세 감면 한도 관리 강화 	
29	학교급식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강과 안전보장 시책 강화,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 	교육위
30	국립대학병원 설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대 병원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지역필수의료체계 거점 확립 	
31	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대 치과병원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지역필수의료체계 거점 확립 	
32	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(ICL)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확대 	
33	고등교육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·지역 단위 RISE 거버넌스 근거 마련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가속화 	
34	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(지방대학 육성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·지역 단위 RISE 거버넌스 근거 마련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가속화 	
35	고등교육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·석·박사 통합과정 신설로 박사학위 취득기간 단축(최대 2년 6개월) - 기숙사비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 허용으로 학생 부담 완화 	
36	과학기술기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R&D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으로 R&D 적시 시행 	
37	방송통신발전기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방송 시 수어방송 제공 확대 · KBS 의무 제공·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 및 종편·보도 방송 사업자는 제공 노력 	
38	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 특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I 대전환 시대, 안정적인 전력을 지역에 공급하는데 적합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지원 	

순번	법안명	주요내용	상임위
39	국제개발협력법	- 주관기관의 조정, 사후조치 권한 강화 및 ODA 발굴·모니터링·평가강화 등 반영	외통위
40	사할린동포지원 특별법	-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·자녀 등도 동반 가족에 포함, 사망 이후에도 가족의 국내 영주 귀국, 정착·생활 안정 지원 가능	
41	군인사법	- 초급간부 대상 자산형성 지원(적금가입을 통한 재정 지원)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- 장려금 지급대상을 대학 졸업 후 지원하여 선발된 사관후보생, 간부사관·단기복무부사관 선발자로 확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	국방위
42	방위산업발전법	- 방산기업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기반 확대, 중소벤처 참여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금융지원 체계 구축	행안위
43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	-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 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 마련	
44	전자정부법	-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효력의 근거와 위변조 시 제재 근거 마련	
45	공무원 재해보상법	- 위험직무 내용 및 요건 정비,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, 공무원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	
46	국립소방병원법	- 국립소방병원 응급의료 등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	
47	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	- 3기 진화위 출범 법적 기틀 마련 및 제도상 미비점 보완 등	
48	집회 및 시위법	- 대통령 관저, 국회의장·대법원장·헌법재판소장 공관 앞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등의 경우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여 위헌 해소	
49	공휴일법	- 제헌절(7.17) 공휴일 지정	
50	국민체육진흥법	- 모든 암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및 부정 수익을 몰수·추징하는 근거 마련	문체위
51	공연법	- 모든 암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및 부정 수익을 몰수·추징하는 근거 마련	
52	저작권법	-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 체계를 보완하고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	
53	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	- 도매시장 경쟁 촉진 : 평가 결과 부진한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, 도매법인 지정 시 공모하여 지정 - 도매시장 유통마진 축소 :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(불이행 시 소명 의무 부과)	농해수위
54	농지법	- 농작업 편의시설(화장실·주차장 등)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, 농촌특화지구 내 지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	

순번	법안명	주요내용	상임위
55	농업협동조합법	- 도시조합의 도농 상생 사업비 납부 의무,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, 외부 회계 감사 주기 단축 등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	
56	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	-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	
57	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법	- 산업 육성 계획 수립·실태조사·전문인력 양성·특구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	
58	항만안전특별법	- 국가와 지자체 의무 규정 및 항만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	
59	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	-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생태계 구축,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	산자위
60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	-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,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	
61	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	-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정적 재원 기반 확충	복지위
62	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	- '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(2025~2029년)'의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개선기획단 존속 기한 5년 연장	기노위
63	산업안전보건법	-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의무화, 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의견서 공개	
64	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	- 기후 전망 유형을 계절 전망, 연기후 전망, 근미래 전망으로 구분하여 기후·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	
65	기상법	- 첨단수치 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 및 안정적인 전문 인력 육성을 전담할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 마련	
66	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	-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 * 법률에 지자체의 자율적 이격거리 설정은 원칙적 금지, 다만 문화재/경관 보호, 안전확보 등 예외적 이격거리 설정은 허용	
67	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	- 전국민 고용보험,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	
68	고용보험법	- 복수 일자리 저임금 근로자 합산 소득 취득 허용	
69	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	- 공무직 위원회 법제화	
70	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	-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대상 확대 (~100인)	
71	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법	-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/육아휴직 허용 -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 도입 및 급여 신설	

순번	법안명	주요내용	상임위
72	항공·철도 사고조사법	-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	국토위
73	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	-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 통합 수립, 주민단체 조기 설립 등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	
74	주택법	- 분양가 역전 문제 해소를 위해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-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 영향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포함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	
75	주차장법	- 주차장 출입구 방해행위 제재 근거 신설 등	
76	자동차관리법	- 전기차 배터리 재이용 등 자원순환 중요성을 감안,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근거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	
77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- 운송 플랫폼을 통한 영업 외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금지 규정 마련	
78	공인중개사법	-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단체 지위 부여 - 자율적 규제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해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 효과적 예방	
79	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	- 은퇴자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은퇴자 마을 조성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	
80	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	-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안정성 확보 조치 강화	
81	항공보안법	- 첨단 보안 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나 공항 간 보안 검색 간소화 또는 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 보안 검색 수준의 위상 제고	
82	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법	- 일본군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 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	